



# 전문가 인터뷰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Q** 우선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신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가고 있고, 그동안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회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 평가해 주시지요.

**A**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분야에만 참가했기 때문에 경제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미국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금융가나, 한국교포사회는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했을 때 저도 동행했는데, 대통령이 미 금융계 리더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국은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나라이며, 한국의 신정부는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이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Q**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국시장은 SK글로벌의 회계 분식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내 외국투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35%를 점유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회장님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영개발연구소인 IMD는 올해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전체 30개국 중에 15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0위였습니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한국경제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IMD 보고서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와는 2003년 초에 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 1월 17일 처음 만나 보였습니다. 그 때 노 당선자의 메시지는 '신정부는 비즈니스에 우호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002년과 2003년 사이 한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SK글로벌 문제 등이 외국투자자들을 주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변화를 평가할 때는 국내외 여러 상황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경제학자로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전세계적인 외국인투자 경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한국 내 외국인투자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외국인투자의 감소는 물론 마이너스로 변화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Q** IMD의 평가는 경제활동, 정부의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그리고 시장관련 인프라 등 네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내립니다만, 이들은 모두 '양(quantity)'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회장님께 '질(quality)'적 차원의 질문을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는, 혹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A**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제 생각으로 그 첫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본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높은 교육을 받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투자가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시장 자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며,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인적자본은 매우 우수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투자요인입니다. 또한 IMF 위기 이후 1997년, 1998년을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정부개혁안에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회계정리의 국제기준화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외국인 투자에 큰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Q**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한편 부정적인 면도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투자를 '주저'한다고 지적하신 점은 지극히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투자가이든 장래 가능성 있는 투자가이든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시장에의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외부요인으로서 세계경제의 실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시장에서도 전체적인 투자자본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니깐요. 사람들은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심스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시장의 내부요인을 보자면, 외국투자자나 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한국시장에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바로 한국의 노동문제일 것입니다.

**Q** 회장님의 의견은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IMD는 작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전체 49개국 중에 47위에 선정, 말하자면 거의 꼴찌라고 할 수 있죠.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A** 포춘(Fortune)지 기사를 보셨나요? 자세한 순위는 기억할 수 없지만, 포춘에서는 한국의 노동 유연성에 관해 그리 나쁘지 않게 평가를 내렸더군요. 저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IMD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노사관계는 20위인 반면 전체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노사관계는 사회규범적인 성격이 강해 단기간내에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 방금 제기하신 문제의 식에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노사관계가 사회 가치관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와 노사관계의 성숙도를 비교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 역사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회 및 비즈니스 문화의 전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좀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 방금 포춘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미국경제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다고 스스로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논할 때 그것은 노동력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직장이동률이 높다거나 해고가 용이하다거나 등의 문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즉 전체 노동계약을 햄버거 가게의 노동계약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회장님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전반적인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A** 그에 대한 대답은 '유연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에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업계에서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가 얼마나 쉽게 회사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노동력의 효율성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논하지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개

##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님, 즉 한국 노동력이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미상공회의소의 산하의 여러 기업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인 P&G 한국지사의 경영이사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유연성을 양적인 잣대에서 평가할 때와 개별 사업장에서 질적 인사관리 차원에서 판단할 때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회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파견노동자법, 해고법 등 한국의 노동기준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OECD에서도 한국 노동법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하는데, 회장님께서서는 전반적인 한국노동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두 가지 질문이군요.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질문과, 제도화된 한국의 노동법에 관한 질문. 이 중 어떤 질문에 답해드릴까요?

**Q** 먼저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죠.

**A**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노동법률가가 아니며, 더군다나 한국법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답해 드리는데, 그것도 한국 사정을 제가 많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한국 노동법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인식(perception)'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러합니다. 이는 다시 '실제'와 '인식' 간의 차이에 관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인식'이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특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기인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한국의 노동법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이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간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다른 잠재 투자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투자국을 결정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를 감안하여 선택합니다.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중국에 투자할 것인가? 홍콩에 투자할 것인가? 즉, 절대적이 아닌 비교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아닌 미국이 투자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한국의 직접적인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국으로서나 혹은 비즈니스 허브(hub)국가로서 말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국에 비해 덜 경직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Q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신정부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으며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정부가 들어선 지는 이제 겨우 약 7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허니문 기간'인 것이죠. 아직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장관 발표나 얼마 전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유연성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허니문 기간인 것이 사실입니다.

Q 노 대통령은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항해 활동한 전직 인권변호사로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신정부는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우선 '경제성장의 조절과 공정한 배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은 '공정한 배분'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노동자측의 교섭력 강화'입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상당히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40여년간 지나치게 과열된 한국경제성장에 기인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A 제가 대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적어도 제게 명확한 것은 노동에 관한 것이건 경제에 관한 것이건 노 대통령의 정책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공정성(fairness)'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직 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란 직업이 원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경제성장의 조절과 공정한 배분'이란 정책기조가 저에게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이나 주주권리, 회계정리의 국제규격화 등과 같은 것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예가 좋을 듯싶은데요, 이러한 분야에서 변화 또는 개혁이 필요할 때 항상 '비효율성'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변화의 일부이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노동자측의 교섭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 분야에 문외한입니다.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쪽에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 혹은 적어도 노동조합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교섭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Q 대부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반적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많은 법학자들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동등하게 상호간 계약을 맺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사용자에게 비해 약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을 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의식들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전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고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만이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달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A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한국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대등(equality)'입니다. 교섭절차에 있어 양측이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는 세 차례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사태와 포항 및 울산에서 있었던 트럭운전자 파업이 그것이지요. 이들 모두 파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부 개입에 대해 피할 수 없었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노조의 기대수준만 높여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파업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 질문에는 정말 대답하기가 힘들군요. 구체적인 사례들과 왜 정부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인식'과 '현실' 간의 차이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역시 비즈니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한국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가 그다지 조화롭지 못하고 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외국인 투자' 문제로 돌아가자면, 이것이 바로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노사 관계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예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CNN을 통해 한국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한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면, 단연코 노사문제가 어두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관계, 강성 노조, 노동의 유연성 등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것은 단연코 한국이 갖는 단점(handicap)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춰주고, 유급 연월차, 생리휴가 등 한국 노동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경제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이러한 특별경제구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미상공회의소는 그런 특별경제구역(SEZ)은 한국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나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비과세, 노동법 개정, 기타 우호적인 조건 등 경제특구에서의 혜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혜택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만을 위한 경제특구는 개발도상국에서나 적합한 것이지 한국과 같이 성숙한 경제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외국기업 혹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 긍정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상공회의소는 미국기업에 좋은 일이라면 한국기업에도 좋은 일이고, 그 반대도 물론 성립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외국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제특구의 차별적인 성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혜택들은 좋지요. 다만 그것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환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경쟁력을 제고하여 더 나은 투자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이 모두가 좋은 것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차별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물론 미상공회의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Q**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같은 맥락의 질문이겠지만 노동법 일부 면제가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법의 개정이나 유연성 제고 등 앞에서 열거한 경제특구의 여러 가지 형태의 혜택들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있을 당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에도 비슷

##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한 특별경제구역이 있었는데요, 이미 특별지역 외 다른 일반지역에 몇 십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제가 포항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데 특별경제구역이라는 곳이 신설되고 저한테는 같은 혜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나라에서도 기존 투자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했지요.

**Q** '푸동'의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매우 성공적이라고들 하는데요. 노동법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가 하는 것들이 과연 실제로 이런 경쟁국들의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특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특구라는 방안이 나온 배경은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장기적인 목적이 경제특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자유투자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구역'으로서 한정된 경제특구라는 점입니다.

**Q** 최근 한국 노동조합들은 산별노조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동조합 쪽으로는 문외한입니다. UAW(미자동차노조)와 비슷한 애기인가요? UAW 대 각 기업, 말하자면, 올해는 크라이슬러 혹은 포드사와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Q** 산별교섭의 장점은 근로조건이 비슷한 곳이라면 한번에 교섭을 끝냄으로써 그만큼 교섭비용을 절감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요. 노조 독점력을 강화한다든지, 단체협약을 획일화해서 노동시장 기능을 저해한다든지 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인 면에서 보자면, 모든 사안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요. 산별교섭은 자원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너무 커지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요. 개별적인 사항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고요. 이 사항에 관해서는 대답하기가 힘들군요.



William Oberin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Q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국 정부에 권고할 만한 노동정책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A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신정부는 교수님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교수님의 충고에 따라 개혁방향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오늘 저를 인터뷰하신 것은 제가 외국인 투자가이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점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노사관계가 한결같이 분규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몇 년 안에 해결할 계획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노 대통령도 워싱턴에서인가 어디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주 훌륭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정책으로 실천되느냐가 문제로 남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사회 진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관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Q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A 저도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네요.